

2023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음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안지연	6/4	[뉴스08] "잘 나가는 이유요?"...롯데 전준우·노진혁이 말하다 [뉴스08] 테이트 폭력 신고했지만...반복되는 보복 범죄	
이동준	6/11	[뉴스워치] "혁신은 무죄"...'타다 흑역사' 되풀이 안하려면 [뉴스현장] 마·중 패권 경쟁 속 한한령 다시 '꿈틀'	
김홍태	6/18	[뉴스포커스]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발표..."보증금 피해규모 서울 강 서구 가장 커" [뉴스17]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임윤주	6/25	[뉴스프라임] "셋째 낳으면 특진"...파격 혜택에 '찬반' 의견 분분 [뉴스워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호받아야"...젊은 교사들의 호소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사임	이동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2023. 01. 31	홍콩 린낭대학교 출강에 따른 자진 사임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신규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6/4(일)	안지연	프로야구가 개막한지 이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오전 8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달 초 롯데는 15년 만에 9연승을 거두면서 한 달 내내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봄에만 잘한다는 이른바 '봄데'라는 별명이 무색하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롯데자이언츠는 최종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적의 흐름이 더 눈에 띄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전해주어 팀 내부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상승에 대한 내부의 평가 외에 외부적인 평가도 보도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개막 전 전문가들의 평가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하거나 예년의 시즌 초반 성적과 현재 성적 비교 하는 그래프, 또는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의 전력 보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면 보도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보도가 더욱 풍성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는 당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롯데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내부 분위기를 먼저 전달하고자 함에 1차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간 스포츠팀 보도에서 어떤 팀의 전력을 분석할 경우 말씀해주신 부분들, 해설위원들의 분석 등을 많이 활용해 보도해와 이번 보도에서는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전력 강화 요인과 분석 등은 전반기 종료 후 올스타전 브레이크 기간에 각 팀들의 상황을 짚어주며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6/11(일)	이동준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초기 상태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는 타다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업계와 검찰로부터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고발당하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그해 5월에는 택시 업계	어느 시대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등장은 기존 산업 및 기득권과 갈등을 빚게 마련입니다. '타다'외에도 '숙박공유'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선거를 앞두고 표가 아쉬운 정치권과 함께 신산업을 막으려 나서는 경우가 항상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에서 1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혁신인지, 한국의 플랫폼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 속에서 기업은 해체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신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나 상생의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창업자들이 법률의 심판을 통해 자력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존과 갈등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환경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역학 관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의 타다 무죄 관련 보도는 운송업계의 시장변화,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유 경제 기반 비즈니스의 등장과 발전이 스타트업 기반이 아닌 기존 대형 기업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보도를 기대해봅니다.	얻어 급속히 성장하거나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 경우, 신산업의 주체가 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EX:쏘카). 국내외에서 스타트업이 획기적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한 뒤, 미래가 보이거나 어느 정도 정착하면 대기업이 투자해 사업을 맡는 경우는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EX: 페이팔, 테슬라).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뺏으려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6/18(일)	김 홍 태	지난 8일 뉴스17에서는 세수 부족 우려가 커져 이번 6월달 말을 끝으로 5년간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국산차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는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18%를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공장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오른다는 것인지 내린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재보다 오르게 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표기준을 개선하여 개별소비세가 내리지만, 한시적인 개별소비	해당 보도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정부 당국의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표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6월 7일 국세청이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 방식을 바꿔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바로 기획재정부가 개소세 30% 감면의 정상화를 공지하면서 하루는 내리고 다음날은 오른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법상 기재부의 개소세 환원은 '인상'이 아닌 '원상 복귀'이므로 법 논리로 국세청의 개소세 부과방식 변화에 따른 인하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개소세를 낮게 내다 갑자기 돌아가니 그 효과가 상쇄돼 실질적으로 오른 것으로 느껴

		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과표기준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도 명확하게 집었지만,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코로나 시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인하였기 때문에 종료를 하는 것도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집어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에서 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도 함께 언급했다라면 좀 더 충실한 보도였을 것 같습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또는 물품세, 판매세)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소비세를 이중 과세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을 얼마나 과세할지는 그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법 감정,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 개소세 부과 목적이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리던 시절의 사치품 과세에서 '외부 효과가 있는 소비에 대한 교정적 과세'로 바뀐 만큼, 일의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3 6/25(일)	임윤주	15일 <뉴스 현장>에서 해당 기업의 인사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내용 살펴볼 것입니다. 한미글로벌 박정욱 인사팀장은, 파격적인 임직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본사는 과거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를 다양하고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해당 정책 역시 오랫동안 계획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복지를 시행해온 회사로, 비용이나 조직 운영의 부담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왔고, 시행 전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내부에서 결혼 여부, 성별 등 직원들의 수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제도든 다양한 반응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때문에 그보다는 도입 배경에 더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이 외에도 육아도우미,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 인정,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고민해온 민간 기업의 사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파격적인 승진 정책 외에도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실제 수혜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해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역시 직원들의 반응을	관련 대담은 저출산 시대 파격적인 승진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들(한미글로벌/인천관광공사)이 있음을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출연 대담 중간 한미글로벌 인사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한 겁니다.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능력을 배제해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흔쾌히 전화 연결에 응해서 성사됐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대담 주제가 승진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그 부분에 집중해 물어봤고, 혹시 그 외 다른 혜택도 있을 것 같아 추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두 기업에서 출산으로 승진혜택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취재 부서와 협조해서 기사화 내지 전화 연결 가능한지 의뢰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국내 첫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아이 아빠를 인터뷰해 보도한 것처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기업은 사전 설문 조사 시행 부분과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하였으나, 다소 축약하여 전달되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6. 0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프로야구가 개막한지 이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오전 8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달 초 롯데는 15년 만에 9연승을 거두면서 한 달 내내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봄에만 잘한다는 이른바 ‘봄데’라는 별명이 무색하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선수들이 하나로 잘 뭉쳐 경기를 치를 때 마다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시즌 초반이지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롯데로 이적한 노진혁 선수도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이 먼저라는 생각이 선수단 사이에 퍼져있는 것을 연승의 원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해 롯데자이언츠는 최종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적의 흐름이 더 눈에 띄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전해주어 팀 내부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상승에 대한 내부의 평가 외에 외부적인 평가도 보도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개막 전 전문가들의 평가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하거나 예년의 시즌 초반 성적과 현재 성적 비교 하는 그래프, 또는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의 전력 보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면 보도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9일 오전 8시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데이트 폭력 신고 후 부실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논란을 전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과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현행법상의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복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분리조치만 가능한 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이 지난해 7월에 발의되었지만 계류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들끼리의 싸움으로만 봐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마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련 법안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활용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증가폭을 보여주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어 시청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한 뉴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경찰청 등의 자료를 통해 보도 시점의 통계 데이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기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28일 일요와이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기종인 A321의 비상구석 가운데 레버에 손이 닿는 좌석 1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서울도 동일 기종의 비상구석 판매를 중단했고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에 대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사들이 사건 발생 후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웃돈을 얹어 앞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항공대학교 송병흠 교수는 비상시에 비상구 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이 승무원을 도와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 전한 것처럼 다른 좌석들에 비해 간격이 넓다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서 비상구 좌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좌석을 판매할 때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 시 다른 고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신체 건강한 고객으로 승무원을 도와 협력할 이사가 있는 승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추가 요금을 지불한 탑승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

당 보도는 사건 발생 후 관련 조직의 대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일반 고객들에게 비상구 좌석 탑승에 대한 경각심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특정 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항공기 이용객 모두에게서 찾은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해당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보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어가 MZ세대 사이에 자리잡았는데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골프가 MZ세대 사이에 열풍이었다면 이제는 테니스가 그 열풍을 이어받았습니다. 28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테니스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평일에도 봄비는 실내 테니스 연습장의 모습과 유통업체의 분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니스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은 테니스를 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테니스 레슨을 받기 위해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외 테니스 코트 예약이 어려워 늘어난 생활체육 인구를 위해 부족한 테니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테니스를 즐기는 MZ세대의 증가로 인해 실내 연습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반대로 야외 테니스 코트는 부족해 실제로 야외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실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어 테니스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적 내용을 다뤘다면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 말미에서 테니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어도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분석적 보도를 통해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동준 시청자평가원(23. 06. 1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초기 상태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는 먼저, 택시사업을 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다 측에서는 운전기사와 렌터카 사업을 결합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여객운수법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법은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어떤 법적인 조연도 구한 바가 있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보고 1, 2심 모두 무죄로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가하다고 전하며, 일명 타다 금지법 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런 타다 형태로 활용하는 운송업체들은 면허를 받고 기여금을 내면 영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며 결국 법의 적용이 일정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방송된 뉴스워치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 이후의 운송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2018년 출시된 타다 서비스는 출시 8개월 만에 2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평을 얻었지만 택시 업계 반발을 시작으로 충선을 앞둔 정치권이 가담하면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고 한 달 뒤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서울 법인택시 기사가 3분의 1이나 줄었고, 2개 업체가 파산했지만 카카오택시는시장 94%를 차지하는 독점을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시장뿐 아니라 의료와 법률, 부동산 중개 등 여러 분야의 혁신사업이 기존 산업이나 기득권의 반발에 막히는 상황에서 '제2의 타다'를 만드는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혁신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는 타다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업계와 검찰로부터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고발당하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그해 5월에는 택시 업계에서 1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혁신인지, 한국의 플랫폼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 속에서 기업은 해체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신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나 상생의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창업자들이 법률의 심판을 통해 자력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존과 갈등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환경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역학 관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의 타다 무죄 관련 보도

는 운송업계의 시장변화,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유 경제 기반 비즈니스의 등장과 발전이 스타트업 기반이 아닌 기존 대형 기업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보도를 기대해봅니다. 과거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은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이슈가 문화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한한령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뉴스현장에서는 가수 정용화의 중국 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블랙핑크 콘서트에 참석했던 중국 연예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을 보도하며, 중국의 한한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조용찬 미중 산업 경제연구소 소장과 관련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조소장은 네이버가 지금 중국에서 차단되고 있는데, 한국 이용자들이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 정부가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내부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략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제한이나 한류 콘텐츠 관련 수입에 대한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내 판매가 많은 제품의 재고를 늘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우회 수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인터넷이 당국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시아 국가에서 단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지금의 한류 현상은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상호 문화교류를 지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뿐만 아닌 산업, 나아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한령의 여파로 가장 강력한 대외 문화산업 상품 무역 수출 국가이자 한류 관광의 최대 소비국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탈세계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탈세계화의 흐름 속 문화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팬들 사이에 혐오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 돌아간 아이돌이 글로벌 성공을 거두며 독자적인 아이돌 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검열과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이러한 반한류와 적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서는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케이팝 팬덤의 온라인 민족주의 성향은 한한령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

제 규제나 개별 사례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 보다는 거시적인 국제관계와 외교적 변화 속에서 문화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다뤘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세 멤버와 그들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전문가와 함께 본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6월 5일 방송된 뉴스현장에서는 문화 평론가 하재근씨와 함께 해당 분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엑소 멤버 3인의 변호사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정산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산 자료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점, 또한 SM이 당초 합의한 표준 계약 기간인 7년을 넘어 부당하게 계약을 연장했다는 점을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SM측의 입장을 전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하여 엑소 멤버 3인 사이에 오해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하평론가는 계약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스타가 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7년 계약을 했어도 이런저런 옵션이 걸려서 10년까지 늘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는 너무 바쁜 경우 소속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신뢰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를 더 강제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산의 투명성, 보상의 미흡함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의 신뢰를 지키면서 정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모든 회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엑소 세 멤버와 SM 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은 한국 아이돌 산업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노예계약 문제와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전속 계약은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돌을 육성하고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많은 아이돌들이 회사와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SM의 인수 분쟁에서 드러난 산업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전속 계약의 한계와 문제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SM 3.0이 취하고 있는 IP 다각화와 수익화 전략을 위해서는 회사의 아이돌에 대한 통제와 지배력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보장하면서 아티스트의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BTS의 사례처럼 아이돌이 사람으로서 작동할 때 더욱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국 아이돌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의 해당 보도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 쟁점이나 계약

조항의 해석뿐만 아닌 정산의 투명성과 보상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6. 1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한 내용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보도했으며, 하반기부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표기준을 개선하여 개별소비세가 내리기도 하지만,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가 증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8일 국토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벌여온 결과에 대한 발표인데요,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해 직접 방송을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전했는데요,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에서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요,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는데요,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 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다는데,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8일 뉴스17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열 달간 경찰에 적발된 전세 사기 사범은 3천 명에 달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을 수사 의뢰했고 검경은 수사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1차 단속 이후 900여명이 추가 검거됐고, 70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조직은 31개나 됐는데요, 이 중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전세사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불법 중개행위를 해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들도 무더기로 붙잡혔다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3천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절반은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하는 한편, 정부는 실질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뉴스17에서는 대대적 단속과 조사로 드러난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하여 두가지 유형을 전했는데요,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부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서를 쓰는 소위 '업계약'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떼먹거나, 깡통 주택 수십채를 자기 돈 한푼 없이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집을 내놓은 30대에게 접근해 매도를 원한 금액인 1억 7,500만원에 사기로 하면서 계약서는 2억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실제로는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2억원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곧바로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차액 2,500만원을 매도인과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수사가 의뢰된 사람들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깡통주택만 골라 사들인 경우도 있는데요, 50대 B씨는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푼 없이 사들였고, 되레 매도인에게 보증금과 집값 차액을 받아챙기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보조원에겐 리베이트까지 줬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조차 못 돌려받는 위험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긴 건데요,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액은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인천 미추홀구 순이었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 2,996채 중 다세대 주택이 57.2%를 차지했고 오피스텔 26.2%, 아파트 14.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 주택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위의 보도에서는 국토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전세사기 의심자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순의 비율이며, 그리고 41명에 대해 전세사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업계약서'방식을 통한 사기 그리고 깡통주택만 사들이는 사기 방법 등을 전하고 있어, 수치와 통계치 등을 통해 현 전세사기 현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업계약서 형태, 깡통전세 형태 등 전세사기 형태를 보도했는데요, 실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단한 유형을 나눠보고 각각에 대하여 간단한 방지책이라도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이 전세사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간단한 기준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초기부터 가장 임대인을 내세워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임대인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깡 투자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는 파악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임대인이 건축회사를 운영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금이 소진된 시기를 따져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는 실제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 모습이 달라서 피해자의 기준도 그에 따라 파악해야 하지만, 되도록 어느 정도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사기의 대책은 무엇인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사기가 계속적일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021년 집값과 전세가격이 급등했을 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24만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만기가 올해 돌아옵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전세 보증금은 1000조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전세금반환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를 올 7월 내에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대출 연장의 효과는 있겠지만, 2년 뒤 만기가 도래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역전세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역전세 비중을 각각 30%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범을 입건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8일 뉴스17에서는 세수 부족 우려가 커져 이번 6월달 말을 끝으로 5년간 이어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국산차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는 늘어날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면서, 여태까지 차를 살때 출고가 3.5%의 개소세를 내왔지만, 7월부터는 5%를 내게 된다고 하며, 2018년 7월 첫 시행 이후 6개월씩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라며 '내수 진작'이란 목표를 달성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세수 펑크 우려라면서, 예상보다 세금은 덜 걷히고 있지만, 나랏빚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상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90만원 늘어나게 되며,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대해 개소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 개소세 54만원이 줄어들지만, 이를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만 다른 자동차 개소세 특례는 더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개소세 100% 면제는 내년 말까지를 한도로 유지되며,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승용차를 구매할 때 300만원 추가 감면하는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개별소비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산차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으로 개소세를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값이라도 국산차 개소세가 더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는데요, 세정당국이 개별소비세를 낮추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산차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18%를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공장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오른다는 것인지 내린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재보다 오르게 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표기준을 개선하여 개별소비세가 내리지만,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과표기준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도 명확하게 집었지만,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코로나 시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인하였기 때문에 종료를 하는 것도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집어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에서 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도 함께 언급했다라면 좀 더 충실한 보도였을 것 같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6. 2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0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등 국가 전반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공기업에서 셋째를 낳으면 특별 승진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한 14일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를 출산하면 승진 가산점을,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특진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자녀 직원을 위한 특별 승진 정책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어 과장급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연한이나 고과 등 조건에 상관 없이 바로 팀장급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노령 인구는 높아지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련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인사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승진의 기준은 업무 능력이나 실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대며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여성계는 출산 장려보다는 육아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보도에서도 실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정책의 수혜자가 될 내부 직원, 혹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반응이 있었다면 그 효과성을 더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민간 기업도 있는데요. 15일 <뉴스 현장>에서 해당 기업의 인사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박정옥 인사팀장은, 파격적인 임직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본사는 과거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를 다양하고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하며, 해당 정책 역시 오랫동안 계획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복지를 시행해온 회사로, 비용이나 조직 운영의 부담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왔고, 시행 전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내부에서 결혼 여부, 성별 등 직원들의 수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제도든 다양한 반응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때문에 그 보다는 도입 배경에 더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이 외에도 육아도우미,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 인정,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고민해온 민간 기업의 사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파격적인 승진 정책 외에도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실제 수혜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해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역시 직원들의 반응을 재차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기업은 사전 설문조사 시행 부분과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하였으나, 다소 축약하여 전달되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15일 <뉴스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손 변호사는 특별 승진 정책을 도입한 공기업과 사기업 사례를 먼저 정리하여 설명하고,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교육지책일 것이라고 설

명했습니다. 그간 사회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겪은 후에는 승진에서 누락하거나 혹은
 경력이 단절되는 등의 경험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두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정책의 숨겨
 진 효과 중 하나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혼, 무자녀 직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해당 기업의 정책 규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승진한다’가 아니라 ‘승진할 수도
 있다’고 하여 융통성 있게 설정해두었는데요. 다른 업무 능력이나 조건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승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업무 능
 력이 뛰어난 직원이 승진이나 경력에 있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는 출산을 승진 요소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포함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사기업 역시 직원들의 의견 수렴, 즉 노사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정책
 으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공기업과 시행 중인 사기업에서 잘 정착된다면 긍정적인 확
 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미혼, 비혼 혹은 자녀가 없는
 직원들에게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분석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
 다. 우려가 존재했던 것과 달리 다른 업무 능력 등을 제외하고 셋째 자녀 출산이 무조
 건적인 승진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오히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승진이나
 경력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을 꺼리는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짚어주었
 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노사 협의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는데요. 16일 <뉴스워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
 사의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 당
 하거나 혹은 신고가 두려워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교
 직 만족도는 23.6%에 불과하고, 교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69.7%로 매우 부
 정적입니다. 교직 생활이 어려운 이유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명확한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정립
 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일 내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안전,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이나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령이, 앞서 살펴본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비 구체적으로 명시되긴 하였으나 상담이나 주의 훈육, 훈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과 학습권, 지도권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일 <뉴스 오늘>에서 보도한 기후 이슈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오존주의보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지금 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약 50년 뒤에는 고농도 오존 발생일이 연간 34일 늘고, 평균 농도도 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보도는 난방 발전 설비 최신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 질도 개선한다면, 오존 평균 농도가 41%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속적으로 기후 이슈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고온이 예고되어 있어, 보도된 것처럼 호흡기 질환은 물론 노약자 건강 등의 문제가 예상 가능한데요. 해당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2023년 6월 4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6월 11일 04시/ 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6월 18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3년 6월 25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